“민주, 언제까지 집안싸움만 할거냐”

개성공단·화물연대 등 현안 대처 무기력
정체성 내부 갈등…“야당 역할 포기”비난

민주당이 개성공단 및 화물연대 문제, 신영철 대법관 거취 문제 등 각종 현안 대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처럼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뉴 민주당 플랜’을 둘러싸고 각 계파간의 노선투쟁이 과열되면서 내부 분열만 반복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성공단 문제, 화물연대 사태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력 집중을 통해 대북문제, 민생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략,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으기 보다는 산발적이며 형식적 대응에 그치면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등 내부 갈등의 치유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뉴 민주당 플랜’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노선 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내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 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이 급변하는 정치여건에서 보다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제시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본질은 외면한 채 계파별 이해다툼 양상이 벌어져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같은 난맥상으로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지율도 10%대 중반에서 머무르며 좀처럼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텃밭인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용산참사, 대북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 당내 통합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실적인 문제에 당력을 집중,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목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 민주당 플랜과 관련, “정작 중요한 정체성을 못 지키면서 왜 분란을 일으킬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며 “현장을 찾아가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지, 국민 여론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의 모 중진 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해 ‘한나라당 2중대’ 발언이나 하는 등 비판을 위한 비판에 나서고 있어 실망”이라며 “화물연대 문제 등 심각한 현안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親)정동영계 의원도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당내 통합”이라며 “지도부는 당내 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금 한가하게 노선투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각종 현안에 대해 야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뉴 민주당 플랜 논의를 6월 국회 이후로 미루자”고 연기론을 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정체성 논란을 수면 아래로 잠재우고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강경대응 등을 통해 존재감을 회복한다고 벼르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 처리와 관련, 시민단체 등 외부와의 연대도 강화,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교 교과교실제 어떻게 운영되나

교과별 전용교실 이동 ‘맞춤 수업’
도서실 등 인프라 확충 선결과제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시범도입 계획을 밝힌 중·고교 교과교실제는 제대로만 정착되면 교실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보듯 학생들이 라커(locker)에 짐을 놓아두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수업=교과교실제란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고교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머물고 교과 담당 교사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형태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교사들이 교실에 머물고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수업 시간에는 영어전용교실로, 수학시간에는 수학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금처럼 학년·반에 따라 소속된 교실을 갖게 되고 각 반에는 담임교사도 배치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교실로 일단 등교를 했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학생 개개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같은 반 학생이라도 이동하는 교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전국 모든 학교에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만큼 일단 600여 곳의 중·고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600곳의 학교는 교과교실제 ‘전면도입형’과 ‘부분도입형’으로 나눠 전면도입형 학교는 45곳 정도만 선정하기로 했다.

전면도입형은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적용하는 학교로, 일단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전면도입 학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과학, 영어 등 일부 교과에만 교과교실제를 적용하거나 기존의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결 과제는=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모든 교과를 한 교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영어교실은 영어수업에 맞게 의자와 탁자를 자유롭게 배치한다거나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를 상시 구비하는 등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용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업에 대해 연구할 시간이 많아지고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교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학생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교실이 없어지는 만큼 학생 휴게실, 도서실, 라커룸 등의 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다.

교원, 강사, 행정보조인력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지원, 교과교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과교실제의 한 방식인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결국 우열반 형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386 헤게모니’ 퇴조

이강래 원내대표 선출로 당직 잃고
박연차 수사 대상 최고위원들 타격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민주당 내 386 인사들의 퇴조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386 인사들은 1990년대 중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돌풍’에 힘입어 무려 40여명이나 원내에 진입했다.

또 비록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으나 살아남은 인사 10여명은 당내에서 실세로 자리를 잡았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김민석, 안희정 최고위원 등 무려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의원이 원내대변인, 서갑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맡으며 당무와 여야 협상을 주도했다.

하지만, 비주류인 이강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원내 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 자리에는 비 386인 우윤근, 우제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사실 이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도 386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386의 퇴조가 원내대표 교체로부터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박연차 게이트’ 에서 친노(親盧)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광재 의원이 구속되고 안희정 최고위원과 서갑원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50대의 한 재선 의원은 “386은 몇 사람 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눈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386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곤란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당직자는 “학생운동 때부터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해온 386의 진정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다만, 성찰이 더욱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빌리 브란트 前서독 총리도 ‘DJ 구명’ 항의 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5·18광주민중항쟁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본보〈5월19일자 6면〉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데 이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도 전 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를 주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입수한 독일 사민당(SPD)의 1980년 9월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국의 사회적 발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런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21일 한국외국어대에서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22일에는 미얀마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